

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국제산업협력 방향

홍 원 표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송 영 현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pm1032@cni.re.kr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의의, 충남의 통상지원 정책 평가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동향 등을 참고하여 충남의 국제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과제의 배경과 목적
2. 신남방정책의 개요
3. 충남 對(대) 신남방지역 산업협력의 현황과 과제
4. 신남방정책 관련 충남의 국제산업 협력 방향

요약

- 신남방정책은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교역지역을 다변화하는 것과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확보하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구체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충남은 최근 아세안과 인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역상대의 베트남 등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의 중간재 편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과 인도와 교역 규모 증가, 품목 다변화가 예상됨
- 충남은 중소기업수출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두 축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통상지원역량 강화, 독자적 사업 전개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품목 및 방식의 다양성 미흡, 국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정책 공백 등 한계를 갖고 있음
- 경기, 대구 등의 사례 관련 신남방지역에 대한 수출지원 활동 대폭 증가 그리고 통상, 투자, 외교 등 입체적 접근 등 경향은 충남이 적극 수용해야 하는 반면,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단방향성 편중 경향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미흡 등은 향후 충남이 극복할 과제임
- 충남의 신남방정책 관련 국제산업협력 방향을 다음 3가지로 제시함. 첫째,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통상지원’에서 ‘국제산업협력’으로 전략적 지위를 높일 것, 둘째, 지역 맞춤형 국제산업협력 전략을 마련할 것, 셋째, 충남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국외거점을 아세안>인도>중국 순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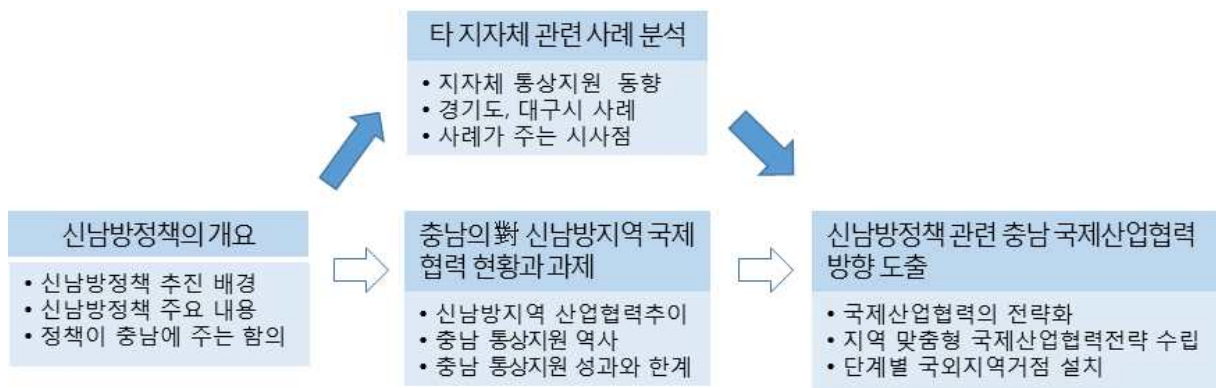
01

과제의 배경과 목적

- 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하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음
 - 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주요 국정 기조로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7년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각각 발표함
 - 경제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교역지역을 다변화하고 품목을 다각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글로벌화 전략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됨
- 충남도는 최근 대중국 수출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대 아세안, 인도와의 산업협력전략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충남도는 지금까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구가했으며, 2018년 기준 중국은 여전히 충남의 최대 교역국임. 2018년 기준 충남의 수출대상국은 중국, 홍콩, 베트남 순으로 베트남은 충남의 제3수출국으로 급부상했음
 - 이러한 수출지역의 다변화 경향은 한중 국제분업구조의 와해 또는 재편, 한베 국제분업구조의 형성 등 구조적 전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현상임
- 충남과 신남방지역과의 국제산업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증가에 따라 교역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충남도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인식하고 국외 비즈니스지원센터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통상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외직접투자 규모와 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원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글로벌화에 대해 ‘통상지원’ 이 아니라 ‘국제산업협력’ 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남의 국제산업협력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
 - 본 과제의 목표는 충남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충남 공공부문 지원을 ‘통상지원’ 이라는 틀을 탈피하여 ‘국제산업협력’ 의 시각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충남도의 통상지원의 추세, 충남 통상지원의 성과와 한계,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등을 수행함
- 연구 수행 절차는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된 신남방정책에 대한 개요, 충남도의 대 신남방지역 산업협력의 현황과 과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례 분석 등을 종합하여 충남도의 국제산업협력 방향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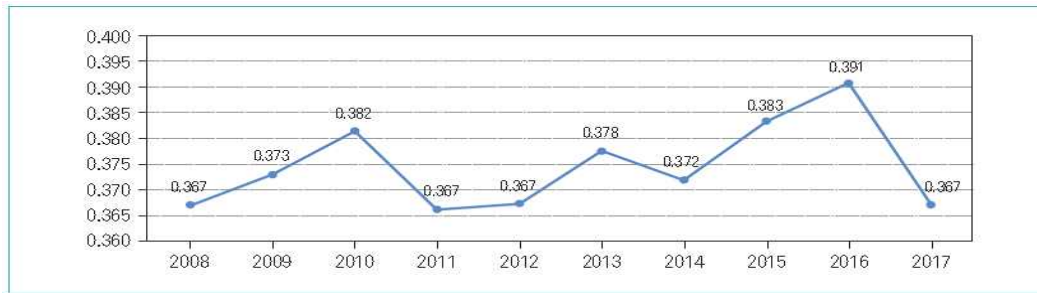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흐름도

02 신남방정책의 개요

1.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

-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 천명
 -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격상
 -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교류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임
 -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 이라고 강조하며, 아세안과 인도를 신남방정책의 양대축으로 규정
-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시기적으로 한반도신경제구상이 2015년 발표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2017년에 발표되었고 지리적으로 각기 다른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통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
 -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환황해시대의 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서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교역지역을 다변화하는 것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주도권 확보 전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환서해경제벨트와 구분되는 환동해경제벨트의 설정,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구분은 경제 및 외교안보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인식됨

- 특히 중화경제권에 의존을 줄이는 전략은 중국의 경제구조고도화 및 수입대체화 전략, 〈중국제조2025〉 추진 등 기존 한중일 분업구조의 와해에 따라 촉발되었음
- 중국경제고도화에 따라 중국은 한국, 일본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최종제품으로 조립·가공하여 미국, 유럽연합 등 시장에 수출하는 구도가 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중 수출 경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2〕 한중 무역경합도 추이(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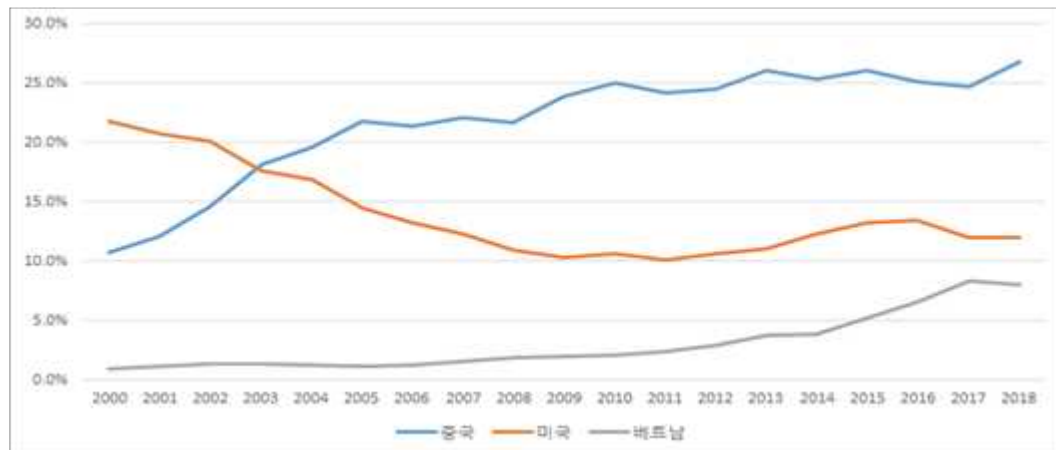
〔표 1〕 한중 주요 품목별 무역경합도 추이(2012, 2017)

	2012(A)	2014	2016	2017(B)	B-A
석유제품	0.897	0.914	0.922	0.938	0.041
섬유류	0.285	0.297	0.312	0.321	0.036
화학제품	0.274	0.282	0.309	0.305	0.031
철강제품	0.424	0.422	0.436	0.475	0.051
기계류	0.495	0.503	0.536	0.512	0.017
자동차	0.387	0.390	0.411	0.429	0.042
조선	0.651	0.540	0.613	0.697	0.047
가전	0.514	0.497	0.448	0.451	-0.063
전자부품	0.654	0.632	0.662	0.622	-0.033
컴퓨터	0.545	0.338	0.262	0.245	-0.300
통신기기	0.799	0.692	0.597	0.623	-0.176

출처: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신현수, iKIET 산업경제이슈(2019.5.13), 산업연구원

-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핵심전략산업에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국산화한다는 의미여서 한중 무역구조의 재편을 의미
- 한·아세안의 산업분업이 기존 한중일 산분업구조 재편을 완충할 핵심 고리로 부상하고 있음
- 대중국 교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장규모, 성장성, 교역구조가 중국과의 교역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 시장 정도임

- 2013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정체하는 가운데 베트남과의 수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아세안 분업구조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그림 3)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 변화 추이(2000-2018)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10.7%	14.6%	19.6%	21.3%	21.7%	25.1%	24.5%	25.4%	25.1%	26.8%
미국	21.8%	20.2%	16.9%	13.3%	11.0%	10.7%	10.7%	12.3%	13.4%	12.0%
베트남	1.0%	1.4%	1.3%	1.2%	1.8%	2.1%	2.9%	3.9%	6.6%	8.0%

출처: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신현수, iKIET 산업경제이슈(2019.5.13), 산업연구원

- 한편 신남방정책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소프트파워 본격화 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제무대에서 경제 규모, 생산 등 하드파워를 중시하던 외교경향이 최근 문화, 정책, 지식 등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음
 - ※ 정부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2)에서 문화, 지식, 정책 교류 및 전수를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
 - 한국은 신흥국 중 최초로 인구 5천만, 일인당 GDP 3만달러 클럽에 가입한 국가로서 신흥국 에게는 일종의 롤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한류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해외에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여 관광객 유치, 국가인지도 상승, 문화산업 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특히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지역 국가와 관련하여 정책 수출은 교통, 통신, 도시개발 등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 모델을 수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개발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여 민간업체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음

2.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

- 신남방정책은 정부 차원의 신남방정책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가 구성된 후 급속도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음
 - 2018년 7월6일 신남방특위 구성 및 운영 지침이 제정되어, 8월28일 신남방특위 정식 출범함
 - 2018년 11월8일 신남방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표성과 사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함
 - 2019년 4월30일 신남방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남방정책 2019년도 중점사업 계획,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방안 및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 등을 논의
- [비전]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모토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목표]신남방정책은 사람공동체,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여역에서 각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사람 공동체) “교류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며 2020년까지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을 지표로 제시
 - (상생번영 공동체) “호혜적, 미래지향적 상생의 경제협력기반 구축”이며, 2020년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000억 불, 2030년 인도와의 교역액은 500억 불로 지표 제시
 - (평화 공동체)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이며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을 지표로 제시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 추진과제는 3대 영역에서 16대 과제를 제시

- (사람 공동체) 관광객 확대, 문화교류 확대, 대상지역 인적 역량 강화, 공공행정역량 강화 지원, 상호 국민권의 보호, 삶의질 개선 등을 포함
- (상생번영 공동체) 교역 촉진 제도적 기반, 인프라 개발 협력, 중소기업 진출 상호 지원, 신산업 협력, 맞춤형 협력모델 등을 포함
- (평화 공동체) 고위급 교류,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국방·방산 협력, 테라사이버·해양 안보, 긴급 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을 포함

01 사람 공동체 People	02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03 평화 공동체 Peace
<p>01.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p> <p>02. 신남방지역과 생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한·아세안 인식 개선 등 추진</p> <p>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 추진</p> <p>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가치 증진</p> <p>05.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p> <p>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세마을 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p>	<p>0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p> <p>08.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 진출 지원</p> <p>09.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물(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p> <p>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p> <p>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p>	<p>12.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 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p> <p>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저변 확대</p> <p>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p> <p>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p> <p>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 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p>

〔그림 5〕 신남방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2019년도 추진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음

- (사람 공동체) 인적·문화적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농촌개발 및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한류 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를 중점 추진
- (번영 공동체) 신남방지역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확대, 우리기업 시장진출 및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
- (평화 공동체) 정상외교 확대,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및 해양쓰레기·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 안

보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중점 추진

- 이외, 사람과 문화의 교류확대가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2019년 중점사업 가운데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방안,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을 별건으로 추진하기로 함

3. 신남방정책이 충남에 주는 함의

- 첫째, 신남방정책은 다목적 전략임을 고려하여 충남의 신남방정책 대응도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
 -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통상전략이 아니고 문화 교류, 경제협력,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는 종합 전략임
 - 특히 대중국 전략과 달리 문화, 지식 등 방면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문화 영향력을 제고하고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소프트파워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무역과 투자 관련 공세적인 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음
 - 이는 지원 정책 범위가 무역 일변도에서 무역과 투자로 확장하는 것과 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국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확장하는 등 변화를 의미함(신남방지역 비즈니스 데스크 사례 참조)

[신남방지역 비즈니스 데스크]

- 신남방정책특위와 코트라(KOTRA)는 2019년 5월2일 서울 코트라 본사 1층에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개소
- 신남방 데스크는 신남방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투자·노무·무역, 공산품 시험·인증, 농수산물 할랄인증, 법률·회계, 금융지원 등 신남방 진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수행 예정
- 신남방 주요 거점에 설치된 코트라 무역관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연계, 신남방 데스크에서 확인된 진출 수요를 현지에서 관리하고 지원. 해당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 등 8곳

- 셋째, 충남의 경제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 검토와 사업화가 필요함
 - 상호 관광객 확대는 외국인 관광이 부진한 충남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충남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충남에서 정책화할 가능성이 큼
 - ※ 2017년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04,854명으로 규모는 전국4위에 해당하나, 외국인주민 비중은 4.8%로, 전국 최고 수준임(전국 평균 3.6%)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교류활동지원은 정부 정책을 충남도 상황과 긴밀히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수산물의 대 아세안 수출뿐 아니라 관련 스마트 팜 모델을 수출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등 적극적 대처 필요
 - 현재 충남은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캄보디아를 제외한 타 국가와는 정식 교류협력 관계가 없으므로, 未(미)수교 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충남은 2019년 현재 베트남 롱안성, 캄보디아 씨엠립주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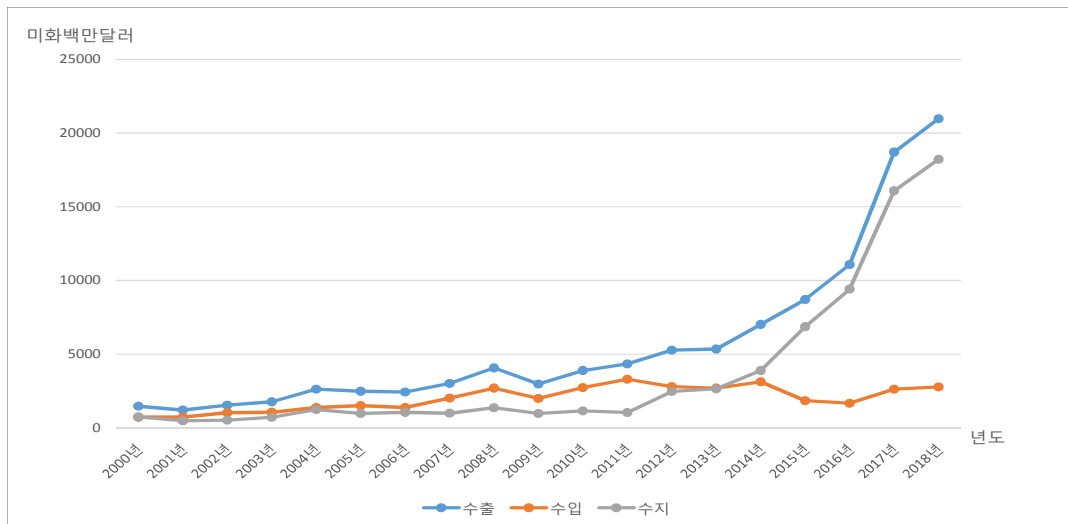
1. 충남의 대 아세안·인도 산업협력 추이

- 이 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아세안(ASEAN)과 인도와의 산업협력 상황을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함
 - 국제산업협력을 교역과 투자 부분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하나, 지자체 단위의 외국인투자과 국외직접투자 자료 구득이 어려워 지자체 단위 자료가 있는 교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1.1. 교역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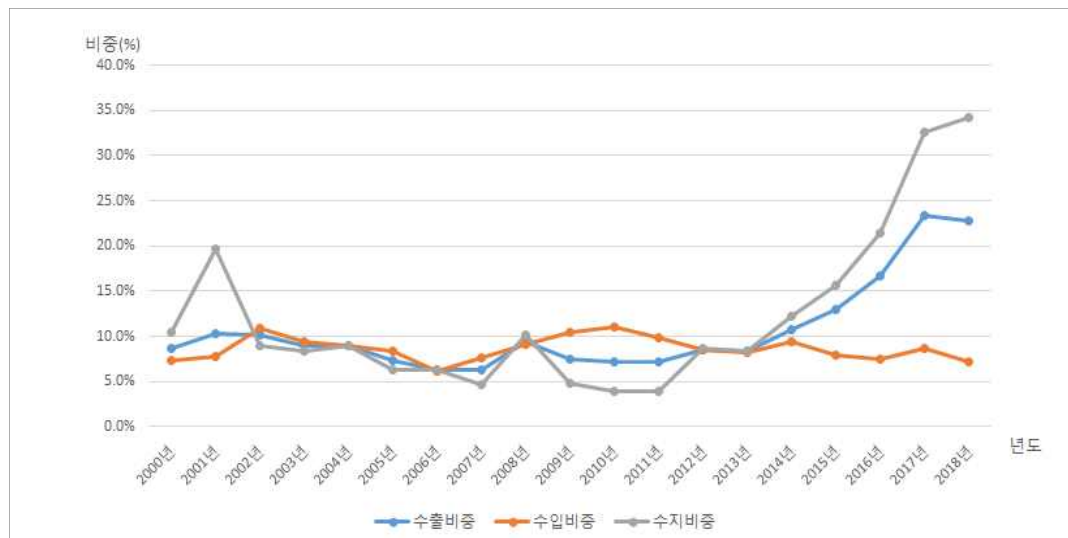
-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2000년 이래 급속도로 증가하여 충남의 3위 지역으로 발돋움했음
 - 2018년 충남의 對 아세안 수출은 약 210 억 달러로, 2000년 대비 14.3배 증가함. 수입은 같은 기간 약 28억 달러로 3.8배 증가. 충남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22.8%로 증가
 - 2018년 충남의 흑자 규모는 약18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0년 대비 24.8배 증가한 수치임. 아세안은 중국, 홍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지역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베트남과의 교역량 증가에 기인함

※ 충남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으로, 2018년 충남의 對중국 수출액(약 266억 1,600만달러)과 무역수지 흑자규모((약 226억 3,000만달러))가 전체 수출, 무역수지 대비 29%, 42.4%를 차지함. 한편 충남의 對 아세안 수출 중 78.8%가 베트남으로의 수출이며, 對ASEAN 무역수지 흑자의 88.8%가 베트남으로부터 도출됨



[그림 6] 충남의 대 아세안 수출, 수입 및 수지 규모(2000-2018)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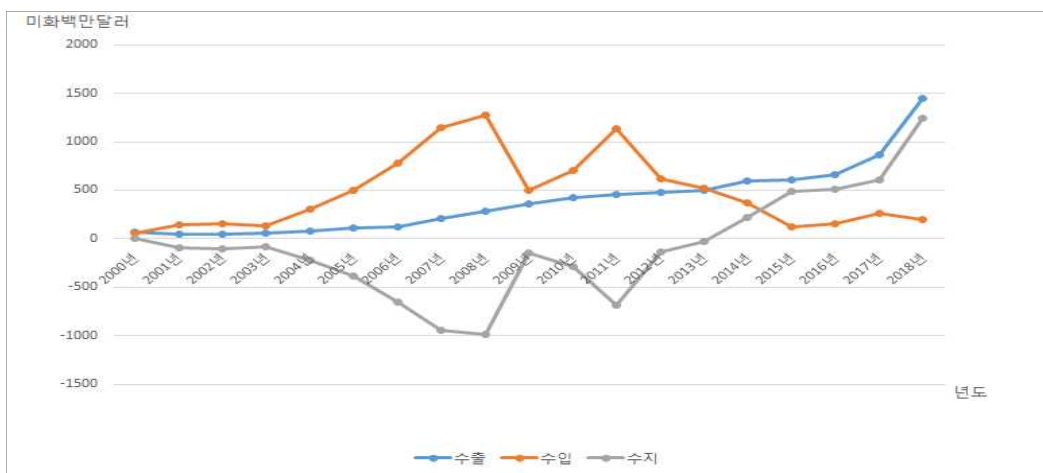


[그림 7] 충남의 대 아세안 수출, 수입 및 수지 비중(2000-2018)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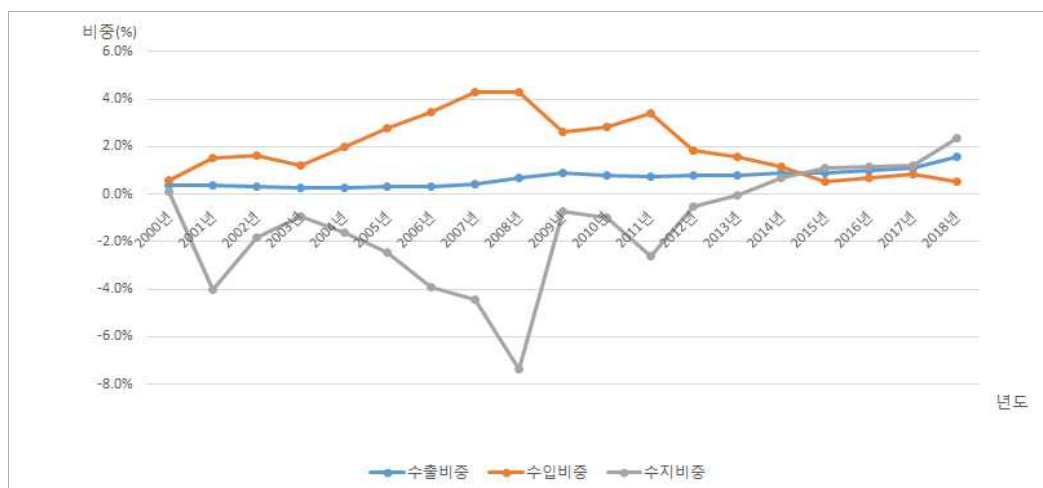
- 충남과 인도의 교역은 아직 미미한 규모이나 최근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충남의 對 인도 수출은 미화 약14억 4,300만 달러로 2000년 대비 2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은 미화 약1억 9,700만달러로 같은 기간 3.5배 증가. 충남 전체 수출에서 인도의 비중은 2000년 0.4%에서 2018년 1.6%로 상승.

-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2013년까지는 별다른 흑자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흑자 구조로 전환되어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음. 2018년 흑자 규모는 약12억 4,600만달러에 달하며 2014-2018년 기간 연평균 16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종합해 보면, 인도는 현재 아세안과 같은 거대 신규시장은 아니나 충남의 신흥 교역대상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림 8) 충남의 연도별 대 인도 수출, 수입, 수지 규모(2000-2018)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충남의 연도별 대 인도 수출, 수입, 수지 비중 변화(2000-2018)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1.2. 대 아세안, 대 인도 교역의 특징

- **충남의 무역이 베트남 등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8년 기준 대 아세안 수출의 78.8%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8.6%), 인도(6.9%), 말레이시아(4.9%)를 대상으로도 수출활동이 이뤄지긴 하나 그 규모는 작은 편임
 - 對ASEAN 수출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2008년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의 나라별 수출규모 편차가 크지 않았음



〔그림 10〕 충남의 국가별 수출규모 변화(2008년(좌), 2018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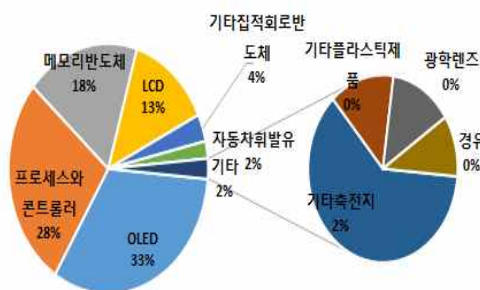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충남의 대 인도 수출규모는 1,443백만 달러로, 순위로 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수준이며, 베트남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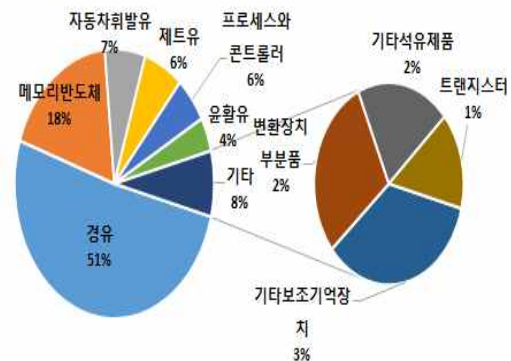
- 충남의 무역은 특정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음
 - 충남의 대 아세안, 인도 수출을 품목별(MTI6단위 기준)로 보면, OLED,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LCD, 경유 및 휘발유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었음
 - 기술집약적 성격의 중간재(부품, 소재)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소비재 수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품목 구성은 충남의 대기업들의 주력상품과 대체적으로 일치함.
- ※ 충남 수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16개시도 중에서 울산시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있음

-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국내 대기업의 휴대폰 공장입지로 인해 휴대폰 부품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반도체, OLED, LCD,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축전지 등은 94%를 차지함. 이는 역으로 휴대폰 생산 공장의 국외직접투자가 수출 증대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 전반적으로 베트남 수출 품목은 고도로 특정 제품 생산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은 편중도가 낮음. 따라서 대 베트남 수출품목은 다각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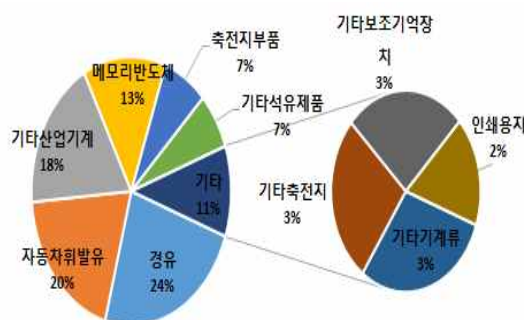
대 베트남 수출 10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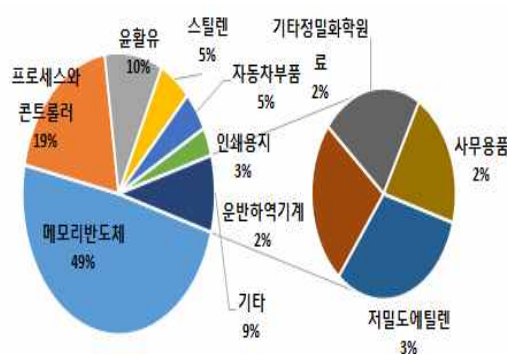
대 싱가포르 수출 10대 품목



대 말레이시아 수출 10대 품목



대 인도 수출 10대 품목



〔그림 11〕 충남의 대 아세안 주요 3국 및 인도 수출 10대 품목(2018)

출처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1.3. 아세안·인도의 협력 여건 및 전망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보고서(doin business report)¹⁾에 따르면, 아세안 및 인도의 기업 환경이 상당한 편차를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
 - 싱가포르(2위), 말레이시아(15위), 태국(27위)의 기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싼남방지역에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은 일찍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경제개발을 추구해 온 국가들임
 - 특히 싱가포르는 최근 10년 간 순위 변동없이 1,2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된 정치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세안 역내에서 금융업의 집적이 가장 발달해 있음. 창업,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적 안배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브루나이(55위), 베트남(69위), 인도네시아(73위), 인도(77위)는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호한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베트남, 인도는 비자본주의적 근대화 경로를 밟아오는 등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제도를 도입한 역사가 짧으며, 최근 개혁개방을 통해 급속히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특히 인도는 최소 3개 이상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10대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됨
- ※아프가니스탄, 중국, 토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터키, 르완다, 지부티 등이 인도와 함께 10대 국가로 선정됨
- 필리핀(124위), 캄보디아(138위), 미얀마(171위), 라오스(154위)는 국내 정치 불안 또는 사회주의 근대화 과정을 겪은 국가들로서 사업환경 여건이 열악한 하위 그룹을 형성함
 - 필리핀은 국내정치 불안으로, 나머지 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국가들로서 국제 표준의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짐
 - 베트남, 인도 등 최근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정부가 집권하는 것과 달리 집권정당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킬 만큼 세력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1) 세계은행은 전 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생애주기(창업, 확장, 운영, 퇴출)에 근거한 10개 기업환경 분야를 평가함. 동일기준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신뢰도가 높은 편임

[표 2]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기업환경 평가

구분	2018년 순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종합순위	77	69	2	27	73	15	124	138	55	171	154
종합점수	67.23	68.36	85.24	78.45	67.96	80.60	57.68	54.80	72.03	44.72	51.26
1. 창업	137	104	3	39	134	122	166	185	16	152	180
2. 건축 인허가	52	21	8	67	112	3	94	179	55	81	99
3. 전기공급	24	27	16	6	33	4	29	141	31	144	156
4. 재산권 등록	166	60	21	66	100	29	116	124	142	136	85
5. 자금조달	22	32	32	44	44	32	184	22	1	178	73
6. 소액투자자보호	7	89	7	15	51	2	132	110	48	185	174
7. 세금납부	121	131	8	59	112	72	94	137	84	126	155
8. 통관행정	80	100	45	59	116	48	104	115	149	168	76
9. 법적분쟁해결	163	62	1	35	146	33	151	182	67	188	162
10. 퇴출	108	133	27	24	36	41	63	79	64	164	168
전년대비 순위변화	↑23	↓1	-	↓1	↓1	↑9	↓11	↓3	↑1	-	↓13

출처 : worldbank(2019)

- 향후 중남과 아세안의 산업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정치적 안정, 제도개혁, 정부의 효율적 경제개발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여건은 국가별 차이가 큰 편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집권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경제여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 민간소비, 공공인프라 지출, 무역확대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GDP 성장률(2018년 5.2%)은 세계 GDP성장률(2018년 3.9%)을 상회하며, 2017년 외국인투자가 1,37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 및 외국인 관광객수도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들이 포스트차이나 생산기지(베트남), 전력·석유화학(말레이시아), 자동차·전기전자(태국) 등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국제산업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싱가포르는 금융물류, 필리핀, 태국은 여행·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함
 - 각국 정부는 산업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 노력 중이며 베트남과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말레이시아의 <비전 2020> 등이 대표적임. 이들 정책들은 신산업육성, 기업 활동 및 투자촉진 등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하여 다양한 대외개방시책을 추진 중임

- 향후 충남과 인도의 산업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의 정치적 안정, 인프라 개선, 제도개혁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9개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23개 공식언어라는 환경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등의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모디 정부가 2019년 5월 재집권하게 되어 기존의 정치적·경제적 흐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IT서비스산업, 자동차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인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창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기술창업과 관련된 생태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등 분야를 8대 핵심 분야로 지정, 육성 중인데,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또한 지역 별로 난립한 간접세를 통합하였으며 무역 관련 관세행정 개선작업을 시행 중임
 - 2000년대 이후 지속된 Look East 정책을 확장하며 한국, 아세안, 일본과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를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음
- 아세안과 인도는 정치적 안정과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사업 환경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충남의 교역다변화의 유력한 파트너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과 인도는 거대한 시장규모,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한국 내지 충남의 교역지역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이 예상됨
 -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충남과 산업분업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 다만, 중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대체화 전략이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와의 산업협력을 동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및 산업분업구조 형성에 관건적임

[표 3] 국제산업협력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ASEAN)

구분	정치	경제	산업	정책·규제
아세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집권체제가 공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특히 베트남의 안정성 강한 편	-민간소비, 공공인프라 지출, 무역확대를 기반으로 ASEN의 성장률(2018년 5.2%)은 세계 성장률(2018년 3.9%)을 상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국의 고속성장이 권역의 성장세를 견인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 방문객수 지속 증가	-2차 산업 중심의 국제산업협력 활성화(포스트차이나 생산기지 베트남, 전력·석유화학 플랜트기지 말레이시아, 자동차·전기전자 제조기지 태국 등) -싱가포르의 금융물류, 필리핀, 태국 중심의 여행·유통업 등 서비스업 크게 발달	-정부 주도 산업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베트남, 라오스), 비전 2020(말레이시아) 등) -신산업육성, 기업활동 및 투자촉진 등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인도	-연방국가, 다양한 공식언어라는 환경에도 안정적인 국내정치 환경 유지 -카스트, 종교 갈등 있으나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황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디 총리 재집권	-세계 경제성장의 新 동력으로 연 7% GDP 성장 -외자의존도 높은 편으로 글로벌 경기변화에 민감 -기업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등의 친기업 정책 추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도모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등 분야를 8대 핵심분야로 지정 -수출주력산업인 IT 서비스산업, 자동차 산업 강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지역별로 난립한 간접세를 통합하였으며 무역 관련 관세행정개선작업 시행 중 -2000년대 이후 지속된 look east 정책을 확장하며 한국, ASEAN, 일본과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출처 : kotra(2019a; 17-27), kotra(2019b; 3-13) 참고 재정리

2. 충남 통상지원의 성과와 한계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상지원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1995년 한국의 WTO가입,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2000년 중국의 WTO가입 등을 주요 배경으로 함
 -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1995년 광역자치단체장 민선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행정주체가 형성되었음
 - 1995년 한국의 WTO 가입에 따라 경제개방이 이루어지고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에 따라 투자부진을 수출 증대나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이 조성되었음.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2000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무역과 투자가 급증하여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

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추세는 충남의 대중국 수출 급증과 맞물려 충남 제조업의 급성장을 가져옴

2.1 충남 통상지원의 과거와 현재

- 충남의 국제통상은 크게 **중소기업수출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 중소기업수출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수출유망기업 발굴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으로 구분되며,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세계한상대회 참가, 상설전시관 설치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

〔표 4〕 충남의 중소기업수출지원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개요

분류	중분	세분(사업)	비고
중소기업 수출 지 원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기업화 사업	2004~2005(중진공)
		수출기업500개 육성사업	2006~2010(도지사공약사업)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2011~현재(자체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04년부터 매년 개최
		세계한상대회 참가 지원	충남 2004년부터 참가지원
	해외 시장 개척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충남 1996년부터 참가
		해외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파견	충남 1992년 개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KOTRA 해외무역관 등 연계, 2000년 개시
		상설전시관(KMC) 참가	1995~1996
	해외 사무 소	상하이무역관·쓰촨 분소	1999.12~2016.12(폐쇄)
		뉴욕무역관	1997.03~2007.12(폐쇄)
		LA통상사무소	2008.01~2016.12(폐쇄)
		상파울루 무역관	2010.01~2012.12(폐쇄)
		쿠마모토 사무소	1998.01~2016.12(폐쇄)
외국인투자유치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따라 개시

자료: 충남도정백서(2018)

- 외국인투자유치는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보됨에 따라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외에 외국인관광객유치는 충남도 차원에서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으나, 대산항 국제여객개시,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표 5〕 충남도 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추이(2003~2017)

단위: 개, 백만불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309	26	42	70	52	67	50	61	62	53	67	28	43	53	57	54
액수	3110	701	1200	329	1366	340	136	191	660	612	561	541	379	264	684	1130

자료: 충남도정백서, 각 년도

- 충남의 대표적인 통상지원인 중소기업수출지원은 기업수출역량강화,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 기업 수출역량강화는 주로 수출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주로 수행됨
 -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주로 국외에서 바이어 등 거래업체 발굴을 통해 수출선을 확보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됨
 - 해외사무소 운영은 국외에 충남 중소기업을 위한 다목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업무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투자자 물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기업수출역량강화]는 초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무역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무역 방식도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여러 국가 또는 지역과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무역 품목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공산품 뿐 아니라 농수산 가공품, 문화 콘텐츠 등 교역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음
 - 또한 통관 관련 행정절차가 디지털화함에 따라 온라인 업무처리가 빈번해지고, 역직구, 해외 직구 등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의 편의를 위한 정부정책이 속속 집행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해외시장개척]은 점점 기업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음
 -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상설전시관(KMC) 참가 등이 있음
 - 집단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제외하면 해외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등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맞춤형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 [해외사무소 운영]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자리매김에 실패하여 전면 폐쇄에 이르렀음
 - 해외사무소 설치의 사실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 등 수출진흥 및 투자유치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실시되었음
 - 그러나 2000년 코트라의 해외자사화사업 개시, 2014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 지구 완전 해제 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2016년 전면 폐쇄 결정함
 - 충남 해외사무소는 미션의 모호성과 운영의 비체계성 등 문제를 드러내고 결국 폐쇄됨

[과거 충남 해외사무소 운영 문제점]

- 미션의 모호성: 해외사무소 개소 시기와 그 후 해외사무소의 미션에 대한 내부의 합의가 불충분했으며, 활동방향이 자주 변하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림
 - 2000년대 초반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조기 정착을 위해 중요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음
 - 수출지원 관련하여 코트라 사업과의 차별화가 크지 않다보니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한계에 부딪힘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하여도 코트라와 비교해서 충남사무소가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 특히 2014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 지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집중지역 및 관련 제도가 사라져 동력이 급속히 상실됨
- 운영의 비체계성: 해외 사무소 운영에서 지휘감독체계, 전문성, 본사와의 협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냄
 - 배치인력이 파견공무원, 민간전문가, 현지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책임과 권한 등 지휘통제 기준이 불명하여 혼선 초래. 특히 업무보고 및 예산 통제 등에서 문제점 드러남
 - 사무소 인력이 업무에 익숙하고 현지사정에 정통하고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발생
 - 사무소 활동이 본사의 지원활동과 긴밀히 결합되지 못하고 부차적 기능에 시간과 인력 소비되었고, 충남 통상지원 사업에서 해외 사무소의 역할이 주변적이었음

(출처: '운영의 비체계성' 관련 충남도청 내부자료 참고)

2.2 충남 통상지원의 성과와 한계

● 첫째, 통상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됨

- 충남도청은 과 수준에서 통상지원조직을 운영해왔고 권역별(중화권, 아주권, 구미권 등) 전문 인력을 갖추어 통상지원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경험을 축적
- 1999년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소한 충남경제진흥원은 2011년 충남FTA활용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음.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등 충남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도 보다 다양해지고 서비스도 세분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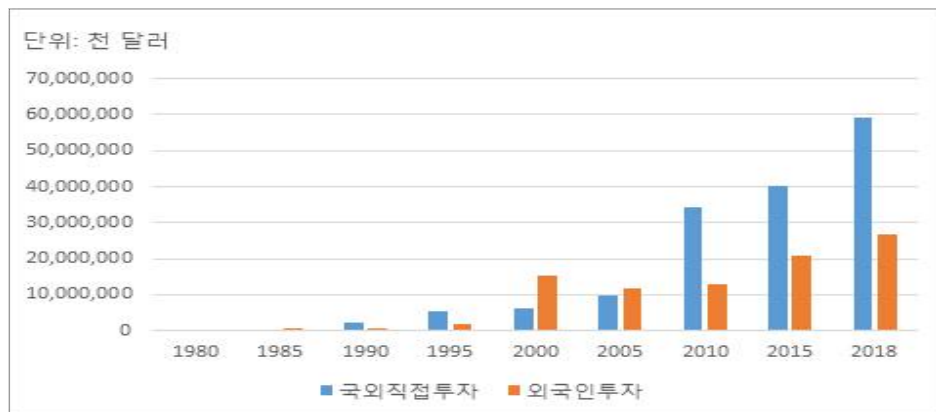
● 둘째, 충남의 통상주체들인 민간기업들의 협회 등 자체 조직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

- 대표적 민간기업 조직인 상공회의소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1966년 개소 이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등을 관할하다가 1996년 서산상공회의소 분리, 2005년 당진상공회의소 분리 등 지역 조직들이 속속 신설되고 있음
 - 2001년 충남벤처협회가 설립되었고, 특히 2016년 충남수출기업협회가 창설되는 등 통상 관련 중소기업들의 조직들이 신설되며, 민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 과거 충남의 민간기업협회 조직이 대부분 대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충남 자체의 조직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충남의 민간기업들이 자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향후 충남의 통상지원 정책 추진관련하여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됨

● 셋째, 충남의 독자적인 통상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양성이 부족함

-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충남의 통상지원은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독자적인 사업이 적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자적인 통상지원 활동이 증가함
- 특히 2004년부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파견, 도 지휘부의 국외순방 투자유치활동 등은 충남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임
- 단, 수출지원대상 품목이나 서비스가 제조물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방식도 오프라인 상담에 머무르는 등 다양성이 개선과제로 남아 있음

- 넷째, 통상지원 이외에 충남 중견중소기업의 국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이 공백으로 남아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0년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한국은 이미 2006년부터 자본순수 출국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4년간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국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 한국의 국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변화(1980~201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외직접투자 기업의 수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
- 향후 중국, 아세안, 인도,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7일 발표한 ‘2018 제조업 국내외 투자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제조업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2009년 99조7000억 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156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000만 달러에서 163억6000만 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함.

○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자리 유출도 큰 폭으로 늘어남.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 171억1000만 달러)와 해외직접투자(ODI · 497억8000만 달러) 금액 중 제조업은 각각 69억8000만 달러, 163억6000만 달러였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출처: 브릿지경제 2019.6.28.)

3. 국내 지자체 국제산업협력 지원 사례

3.1 경기도 사례

- 201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시장 다변화, 통상·투자·외교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함
 -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新3고 현상(원화강세, 고금리, 유가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의 성장세 둔화, 외자유치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수출은 2013년 수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사드 갈등,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문제로 2016년에는 수출이 1천 억 달러에 미달함.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자유치 규모도 2016년 들어 전년대비 약 25% 감소
 - 경기도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2017)」, 「道(통상·투자·외교) 다변화 전략(2017)」 등을 추진 중인데,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 경기도는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수출거점 확충, 신규판로 개척·외자유치 다변화 지원, 통상·투자·외교의 체계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 경기도는 해외수출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수출촉진을 추구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10개국 13개소의 경기비즈니스센터(이하 GBC)를 운영 중이며, 신남방지역인 인도 뭄바이, 베트남 호치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가 포함됨
 - 이들 4개소 GBC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대(對)신남방정책 대상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추진에 이르는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중. 현재는 통상지원 중심이나 향후 우호적인 시장개척 환경 조성을 위한 ODA 기능도 강화할 계획임
 - ※ 경기도는 2005년과 2008년 이미 신흥전략 시장인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선제적으로 GBC를 설치한 바 있으며, 2016년 베트남 호치민, 2018년 싱가포르에 GBC를 확대 설치함
 -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쳐 미얀마에도 GBC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경기도가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목표시장 중 하나로 인식함을 보여줌

- GBC는 현지에서 G-FAIR, 수출상담회 개최, 온라인마케팅 지원, 국외비즈니스 관련 출장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수출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수출마케팅의 거점 역할을 수행 중임



〔그림 13〕 신남방정책 대상국 내 GBC 설치지역(좌) 및 GBC의 주요기능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2018년도 무역통상진흥정책 및 2018년 경기도 통상전략 및 수출지원사업

- 경기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 EU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신규판로 개척과 관련하여 G-FAIR 개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온라인마케팅 지원²⁾, 수출상담회, 가구 뷰티분야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 중임
 - 경기도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ASEAN 및 인도에 대한 사업 비중이 증가함

[최근 경기도의 아세안, 인도 지역 신규판로개척 사업 수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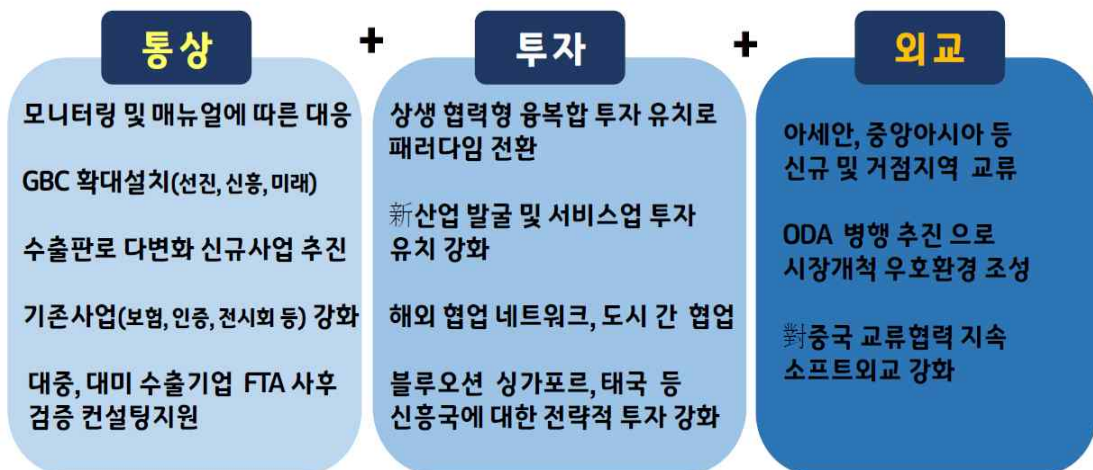
- 2018년 개최된 해외 G-FAIR(총 5차례) 중 2차례가 인도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으며 성과 역시 가장 우수한 편으로 나타남. G-FAIR 뭄바이는 경기도의 우수 상품을 전시하고 사전에 매칭된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연속 개최됨. 지금까지 770개 중소기업에 인도시장 수출의 기회를 제공함
- 2018년 개최된 G-FAIR 호치민에서는 1,779명의 현지 유력바이어가 참가하였으며 미화 7,856만 달러, 4,743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 성과, 계약 성과를 거둠. 경기도 중소기업의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관련행사를 확대추진할 예정임

(출처: 매일일보(2019.05.16), ‘지페어 뭄바이 개막’ 신남방정책의 중심 인도 교두보 역할 기대; 브레이크 뉴스(2018.12.02), 경기도, 한풍저력 다시 확인한 ‘2018 G-FAIR 호치민’ 성공리 폐막.)

2) 동남아 1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를 통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세안을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투자유치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등 ASEAN 주요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제조업과 부동산 위주의 외자 유치에서 벗어나 4차산업기술 강소기업에 대한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로부터 약 1억 3,500만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2017년)하는 등 성과를 거둠
-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통상, 투자, 외교의 체계적인 연계 도모하고 있음
 - 경기도는 수출과 투자시장 다변화라는 목표 하에서 통상, 투자, 외교의 연계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시장과의 산업협력 도모에 있어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 이에 따라 신남방 국가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임. 이와 관련 아세안 지역 3개소에 설치되어있는 GBC와 경기도 ODA 연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보호주의 확산 대응 수출 다변화 연계전략 ”



〔그림 14〕 2018년 경기도 수출지원 정책방향

출처: 2018년 경기도 통상전략 및 수출지원사업

3.2 대구광역시 사례

- 대구시는 2010년대 후반 국제산업협력 관련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자 타개 방법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 중심의 전략시장 개척을 도모함
 - 2010년대 후반 들어 주요국 보호무역 심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등 대구시 특화산업분야의 주요국 수출 하락세 전망 등 통상관련 하방 요인이 계속됨
 - 같은 시기 수출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2018년 수출액 약 81억 달러), 수출대상국가가 미국,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품목이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등 감소 예상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 상존. 이와 함께 2010년대 초중반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외자유치 규모가 16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매년 미화 1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던 2010년대 초중반과는 달리, 2016, 17년 외자규모는 각각 4,500만달러, 3,2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며, 2018년 역대 최대규모인 미화 7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나, 투자 호조가 지속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임
 - 대구시는 신흥시장 개척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해외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신남방정책 대상지역, 특히 신남방정책 지역과의 산업연계 확대라 할 수 있음



(그림 15) 2019년 대구광역시 수출지원 시책방향

출처: 2019 대구시 수출지원 시책(대구시청)

- 대구시는 신남방정책의 거점국기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출거점 확충, 신규판로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용한 동남아 자본·기업 유치 등 추진 중
- 대구시는 해외 수출거점 확충의 일환으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통상사무소를 설립함
 - 대구시는 당초 중국 상하이에만 국외수출 거점인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세안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통상사무소를 설립. 이를 위해 2015년 호치민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통상사무소는 베트남 시장조사, 투자자 및 바이어 발굴, 기업유치,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 등 대구-베트남 국제산업협력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현지지원 역할을 수행 중임
 - 통상사무소 외에, 지역은행인 대구은행 역시 베트남(호치민),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대구은행의 아세안 지역 진출 동향]

○ 대구은행은 2014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이후 2016년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 2018년 캄보디아 특수은행 인수 등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미얀마에도 진출 예정임

○ 아세안에 진출한 지역 기업의 금융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시장조사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임

○ 2019년 6월초 기준 대구은행의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6.95%), BlackRock Fund Advisors(지분율 6.07%), 우리사주조합(지분율 3.82%) 등이며, 대구시의 지분은 없는 상황임. 단, 대구은행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제1급고 역할을 하며 수조원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SEAN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시장개척을 위한 전초기지, 수출지원 교두보 역할 기대

대구시가 지난 10일 호치민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수출 및 해외의 전초기지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와 베트남 호치민시는 양 도시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2015년 5월 29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보다 발전된 우호관계와 상호교류를 위해, 이번엔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해외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대구지역 기업의 해외 활동과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호치민 사무소는 2013년 1월에 문을 연, 상하 사무소에 이어 2번째 운영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구 지역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통상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HOME > 경제 > 경제일반

대구은행, 국내외 영업망 확충 '속도'

◇강선일 ◇ 송인 2018.11.19 21:00 ◇ 5댓글 0

미얀마에 MFI 형태 해외법인 내년 상반기 설립 여부 가시화
충청권에도 점포 개설 검토

DGB대구은행이 인도차이나반도에 속한 '미얀마'와 충청권 중심도시인 '대전·세종' 등 국내·외 영업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최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에 이어 인도차이나반도 내 국가인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본격적 추진에 나섰다. 설립형태는 미얀마 금융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을 거쳐 우선 소매대출금융기관(MFI)으로 시작해 추후 상업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당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을 연내 마무리지를 계획이었지만, 전일 그룹회장 겸 은행장 구속사태와 하이투자증권 인수 지연 등으로 인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현지법인은 내년 상반기에 설립 여부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출처: 출처 : 생생대구뉴스(2016.10.12) 및 대구신문(2018.11.19) 기사자료)

- 대구시의 신규판로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은 주로 아세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구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남방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지원사업은 종합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위주로 추진 중임

[최근 대구시의 아세안, 인도 지역 신규판로개척 사업 수행 현황]

- 대구시의 2019년 17회 예정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5회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국가(4회), 인도(1회) 파견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27회 예정된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사업 중 9회가 동남아에 대한 참가사업으로 계획됨
- 반면,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러시아(1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구광역시의 수출다변화 정책은 신남방정책 대상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함
-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중 무역실무 교육사업에서도 신남방정책 주요국을 겨냥한 사업이 추진 중임. 무역협회와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는 베트남 수출에 특화된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 전략과정>을 운영 중임
- 박람회, 전시회의 성과는 상당히 큰 편임. 일례로 2019년 6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대구 식품 박람회에서 미화 약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 553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달성함

(출처 : 경북일보(2019.07.01) 및 2019년 대구시 수출지원 시책)

-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용한 동남아 자본·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2007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초반에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거대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7년 이후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201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민관합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싱가포르에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역 유망 ICT기업 11개사가 함께하는 투자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지 기업들과(지역기업 1개사 당 평균 3개사) 즉석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하는 등

지역의 ICT 기업과 함께 한 전국 최초의 외자유치 모델로 평가받음

- 투자유치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통상관련 지원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임. 시장개척단은 2019년 4월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미화 약 600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구은행, 호치민 무역진흥센터, 호치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구역 내 기업의 기술 우수성 홍보,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기업지원 활동을 실시함

3.3 사례 종합 및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첫째, 경기도와 대구시 사례는 충남의 국제산업협력과 관련하여 ①신남방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증가, ②해외거점 확충 및 다변화, ③신남방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증가 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중국 등 특정 국가 편중형 산업협력이 가지는 한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비교적 시장여건이 성숙한 아세안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 사업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는 아세안, 인도 등지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유치,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 중이며, 대구시는 통상사무소 외에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은행 현지사무소를 지원역량으로 활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에서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외자유치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신남방지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 생산기지에서 국외직접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임
- 둘째, 경기도 사례는 통상, 투자, 외교 등 다양한 활동의 시너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충남도도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통상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상지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기도가 통상, 투자, 외교 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충남은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지역이 싱가포르, 태국 등 경제가 발달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충남은 싱가포르, 인도 등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는 교류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충남은 아세안지역에 베트남, 캄보디아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향후에 아세안 및 인도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 추가를 고려해야 함

- 셋째, 경기도와 대구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산업협력이 단방향성을 띠고 있어 그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개념³⁾에 근거에 국제산업협력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구매·조달(외자유치 또는 해외투자),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제조(해외 또는 국내지역), 판매(수출 또는 수입)와 관련된 활동으로 나뉘볼 수 있음
 - 경기도와 대구시 사례는 신남방정책 관련 자기 지역으로의 외자인투자 유치, 지역 제품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으로의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제산업협력이 단방향성을 띠고 있음
 - 그 결과 아세안과 인도와의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교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는 무역 불균형을 누적시켜 파트너 국가가 수입대체화 전략으로 선회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그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함

- 넷째, 경기도와 대구시 사례는 상황이 상이한 국가들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을 펴는데까지는 나가고 있지 못함을 보여줌
 - 아세안 지역은 내부 격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첨단산업의 기초가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는 세계적인 ICT 기술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곳임
 - 기술협력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을 위한 정책사업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 이는 선진국들이 인도를 기술협력 파트너지역으로 삼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3) 서용원 외(2019)에 따르면, 공급사슬관리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재 및 자금 조달, 제품과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04

신남방정책 관련 충남 국제산업협력 방향

- 충남의 신남방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국제산업협력의 전략화, 지역 맞춤형 국제산업협력 전략 마련, 단계별 통상지원거점 설치 등을 제시함
 - 현재 충남경제는 중화권경제의 의존성을 줄이기위해 국제교역지역을 다변화하고 품목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민간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외직접투자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통상지원 정책 및 정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국제산업협력’ 관점의 도입을 필요로 함

1. 국제산업협력의 전략화

- 수출입 등 교역뿐 아니라 국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출입은 1조1390억 달러인 반면, 국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는 합계 861억 달러로 총 수출입액의 약 7.6%에 불과함
 - 그러나 2000-2018년 기간 국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301%로, 수출입증가율 252%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국외직접투자는 850%로 비약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국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정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국외직접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0-2015년 기간 잠시 주춤했으나 2015년 이후 최근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한국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증감율 비교(2000, 2018)

구분		2000	2018	증가율
경상	합계	323,654	1,139,007	252%
	수출	169,523	625,437	269%
	수입	154,131	513,570	233%
자본	합계	21,501	86,163	301%
	국외직접투자	6,236	59,263	850%
	외국인투자	15,265	26,90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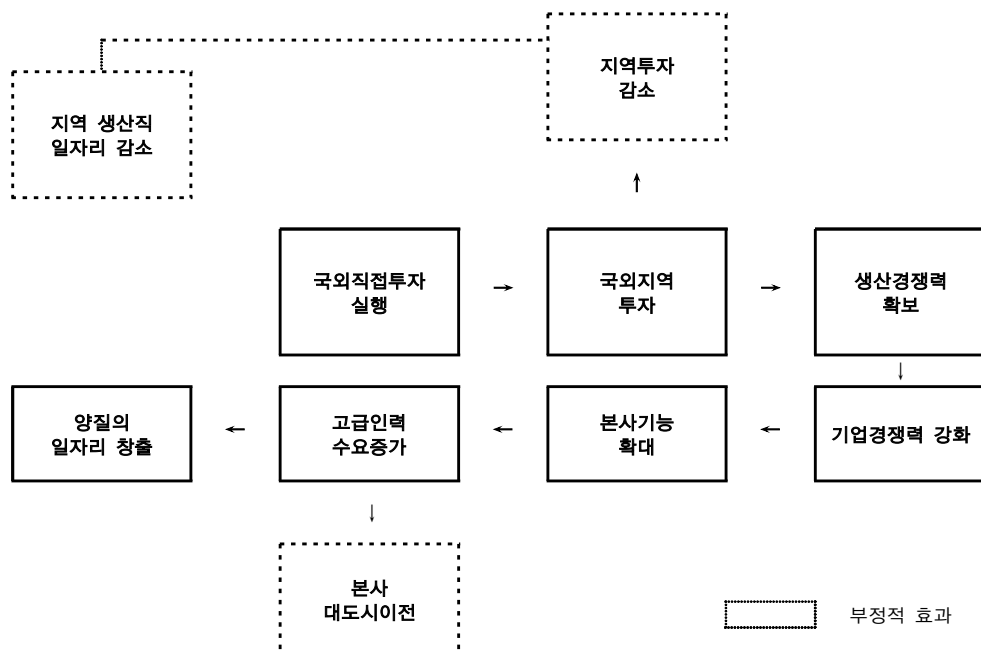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향후 FTA 확대 등으로 인해 무역과 투자 지역이 확대되고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아세안, 인도, 북한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향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큰 충남은 중소기업의 국외직접투자에 따라 지역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범위를 통상지원에서 국제산업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남방지역 비즈니스 데스크, 국외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플랫폼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국제교역관련 충남도의 정책은 사실상 INBOUND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음. 즉 국내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여 수입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영역에 국한되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국외직접투자 등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표 7〕 국제산업협력 분야 구분 도해

구분	조달	생산	판매
INBOUND	외국기업의 국내 아웃소싱	외국인투자유치	수출 지원
OUTBOUND	국내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국외직접투자	수입 지원

- 향후 FTA의 지속 확대, 글로벌화,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OUTBOUND 영역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므로, OUTBOUND교역을 정책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
- 지역 차원에서 통상지원 대신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산업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산업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
 - 수출지원 등 INBOUND 관련 영역뿐 아니라 OUTBOUND 영역을 포괄하여 이를 국제산업협력으로 범주화하여 다루어야 하며, 이는 곧 정책범위의 확대를 의미
 - 한편, 단순한 사업계획 총괄 수준의 ‘통상진흥계획’ 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제산업협력전략’ 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
- ‘국제산업협력전략’ 은 국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충남의 경제와 투자대상지역 간 경제의 고도화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경제의 고도화 순환 체계라 함은 충남 소재 노동집약산업 생산기능의 해외 이전과 충남 소재 기업의 본사지원기능의 증대를 통해 상호지원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16] 국외직접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고도화 순환체계

2. 지역 맞춤형 통상지원 및 산업협력전략 마련

-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충남의 특성상,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하고 최종소비지(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는 지역이 충남의 중요 교역 지역임
 - 충남은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수출지역은 주로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흥국임.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음
 - 이는 주로 한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중국, 아세안, 인도 등이 주요 수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외 북한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교역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충남의 주요 수출지역이 될 중국, 아세안, 인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은 매우 상이함
 - 중국은 〈중국제조2025〉 등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충남의 주력 수출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한국과의 산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나, 현재 충남의 가장 큰 수출지역임
 - 아세안은 국가상황이 매우 다양한 10개 국가의 연합체로서 한국이 주로 투자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전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재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임. 다만 그 내부에서도 국제 표준에 대한 수용성에서 큰 차이가 남
 - 인도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며, 아직 글로벌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으나 잠재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동일한 언어, 지리적 인접,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으로 정국의 향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협력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핵심적으로 산업경쟁관계 또는 산업협력관계가 각기 다른 상황임
 - 2010년대 들어 한중일 분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와해되었으며, 중국은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중국제조2025〉 추진에 따라 첨단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이 업종들에서 경쟁관계가 격화될 것임([표 8 참조])
 - 아세안 중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국가는 노동집약형 산업(섬유, 의류 등), 단순조립형(가전 등) 산업의 입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한국과의 분업구조가 비교적 분

명하게 자리 잡고 있음

〔표 8〕 국별·산업별 국제 분업구조 형성 동향

업종\국가	베트남 등 아세안	업종\국가	중국
섬유의류신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TPP 혜택 활용위한 이전	반도체	고부가가치 장치산업은 중국내 생산 확대
가전제품휴대폰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역내 제조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위한 이전	항공	일부 기종의 최종조립 공장 설립 검토
기계부품	저렴한 인건비 활용 및 TPP혜택 활용위한 이전	화장품	기획연구생산 통합공장 설립

자료: KOTRA, 2016,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KOTRA

- 인도는 최근 글로벌 생산분업구조에서 강력한 생산기지로 전환 중인데, 인도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자국 내 창출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생산기지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과도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 형성이 예상됨



〔그림 17〕 인도의 최종재 수출로 인해 자국 내 창출되는 부가가치 추이

자료: 강내영·김건우, 2018, '글로벌 생산분업구조의 변화 및 시사점', 트레이드 포커스(2018제53호), 한국무역협회

- 한국과 중국, 아세안, 인도와의 분업 트렌드를 볼 때, 중간재를 주력수출품목으로 하는 충남에 계는 향후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지역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며, 통상지원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충남과 각 지역의 산업관계에 맞는 산업협력전략 마련이 필요함
 - 아세안 지역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는 충남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해당 지역

이 최종재를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산업분업구조가 형성 중이므로 이에 걸맞은 산업협력전략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

- 인도와는 현재 교역규모나 기업진출 강도가 강하지 않으나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경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산업협력정책 마련이 필요
- 한편, 중국은 충남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이므로 높은 정책관심이 필요함. 다만, 현재 중국과 한국의 국제분업구조가 와해되었고 새로운 국제산업협력구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재 마중 무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충남도는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지역의 사업 환경과 시장진출단계에 조응한 통상지원 및 산업협력전략이 필요함

- 사업 환경 양호 지역은 국제 표준 정착, 기업진출경험 축적, 정보접근성, 현지금융조달 등 측면에서 유리하여 중소기업진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통상지원도 지적재산권, 금융조달 등 보다 전문화되어야 함. 사업 환경 불량 지역은 반대로 시장정보 제공, 제도 이해 등 기초적인 통상지원이 매우 중요함
-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사가 긴 지역은 중소기업이 독자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반면, 역사가 짧은 지역은 대부분 대기업 동반 진출 방식이 유리함. 실제로 진출 역사는 중국>아세안>인도 순으로 길기 때문에 인도 진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음

3. 국외 통상지원거점의 단계별 설치

● 충남의 국외통상지원거점 설치는 통상지원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과거 전례를 감안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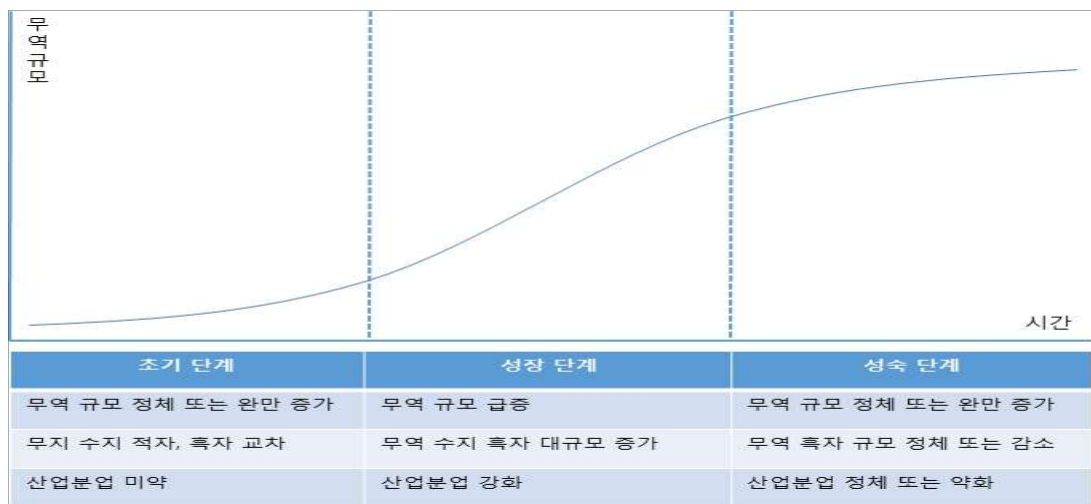
- 국외통상지원거점은 충남의 통상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서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었으며, 성과 등 문제점으로 인해 2016년 전면 폐쇄되었음
- 국외 현지에 통상지원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징성 있는 조치이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실효성 또는 성과에 대해서는 대중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에 여러 거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외지원거점 설치 시 크게 설치의 시의성과 전략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임

- [시의성]이란 국외지원거점에 대한 충남 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로서, 충남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수요와 충남과 해당 지역의 산업협력의 객관적 수준 또는 산업협력의 발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략성]이란 그 지역이 충남의 미래발전에 가지는 종합적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대상국의 잠재 경제 규모, 지리적 인접성, 문화역사적 친화성 등으로 고려한 대상국의 중요성을 의미함

● 시의성 기준으로 보면, 아세안>인도>중국 순임

- 충남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사무소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은 중국, 아세안(베트남), 인도 순으로 나타남
- 충남과 개도국과의 산업협력의 발전 단계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며, 개도국 경제가 고도화되면 조정기를 거쳐 새로운 협력단계에 진입함. 발전 단계는 크게 교역규모와 교역품목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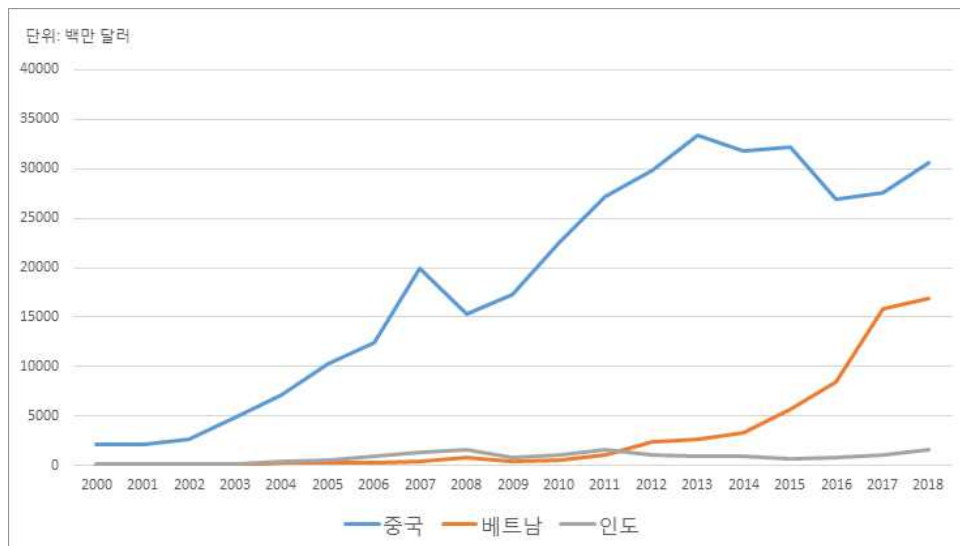


(그림 18) 개도국과의 산업협력 단계 구분

- [중국]과는 이미 산업협력이 성숙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즉 2002~2013년 기간 성장 단계를 거쳐 2014년 이후에는 성숙 단계에 이르러 있음. 향후 조정기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과의 무역관계는 2010년부터 성장 단계에 진입하여 현재 성장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며, 성숙단계로의 진입 여부 판단은 시기상조임

- [인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4년 간 무역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곧 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9] 충남과 중국, 베트남, 인도와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 규모 추이(2000-2018)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따라서 해외사무소 설치의 시의성 측면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베트남에 국외통상지원거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중국은 기존 산업분업구조의가 와해된 상황에서 새로운 분업구조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시의성 측면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 <중국제조2025>의 항배, 한반도비핵화를 둘러싼 한중 긴장 등 요인들로 인해 한중 산업분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 불확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과 같은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제반 여건이 방향성이 가시화된 후 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적임

● 전략성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도>아세안 순임

- 전략적 중요성은 해당국의 잠재 경제규모, 지리적 인접성, 문화역사적 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함. 잠재 경제규모는 2030년 기준 GDP 규모, 지리적 인접성은 항공 교통거리, 문화역사적 친화성은 충남 거주 외국인주민 숫자 등으로 측정함

- [경제규모] 3개 지역의 경제규모를 2031년 구매력평가기준 GDP(next big future 추정)로 추정하면, 중국은 673조 달러, 아세안은 212조 달러, 인도는 361조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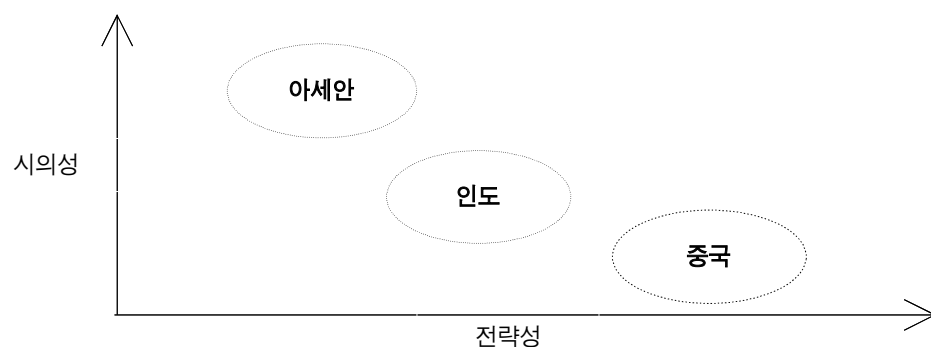
[표 9] 중국, 아세안,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상대 비교 순위

구분	중국	아세안	인도
경제규모 순위	1	3	2
지리적 인접성	1	2	3
역사문화적 친화성	1	2	3

- [지리적 인접성] 각 지역별 비행거리는 중국 최단거리에 있는 산둥성까지는 1시간 이내, 아세안의 최단거리 지역인 필리핀은 3시간 이내, 인도는 7시간 이내임. 육상, 해상, 항공 어느 측면에서도 중국이 가장 가깝고, 아세안, 인도 순임
- [역사문화적 친화성] 2017년 기준 충남 거주 국적별 외국인 주민 수는 중국이 32,381명, 아세안 지역 29,113명, 인도는 최대 8,568명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분석 결과 보고). 따라서 중국이 가장 가까우며, 아세안과 인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세안이 인도에 비해 친화적이라고 판단됨.

※ 경제규모, 지리적 인접성, 역사문화적 친화성 각 측면에서 중국이 1순위를 가지며, 아세안과 인도는 측면별 순위가 상이하므로 측면별 가중치를 구분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경제규모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보고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세안보다 크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 추후 상세 연구 필요함.

- 시의성과 전략성을 종합하면 아세안은 시의성이 가장 크나 전략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으며, 중국은 시의성은 가장 작으나 전략성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인도는 중간 수준임



[그림 20``] 아세안, 인도, 중국 시장의 시의성, 전략성 도해

- 국외 통상지원거점 설치는 베트남, 인도, 중국 순으로 단계별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임
 - 충남과의 교역규모 증가세가 가장 크고 중소기업의 국외 통상지원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 베트남임을 감안하여, 베트남에 통상지원거점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필요
 - 인도는 비록 충남과의 교역규모는 미약하고 증가세도 그다지 높지 않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규모 또한 거대하므로 인도에 통상지원거점을 설치하되 베트남 등 아세안지역보다는 시의성이 떨어짐
 - 중국은 전략적으로 충남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나 최근 교역규모가 성장이 느리고 기존 산업분업이 와해되어 불확실성이 크므로 불확실성이 견히는 것을 기다려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충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발도상국과의 산업분업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음에 주목해야 함

- 국외사무소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핵심 미션으로 하고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연결고리로 주민복지 증진 또는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국외사무소는 이렇게 도민의 지지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미션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를 지방정부가 지원 또는 관여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
 - 그밖에 외국인투자유치, 관광 마케팅 등 업무를 국외사무소에 추가하는 것은 그 성격이나 대상이 통상지원과 상이하므로, 인위적으로 뭉뚱그려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분리하여 추진하고 성과를 확인한 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해외사무소 운영방식은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활동성과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난 시기 충남의 해외사무소 폐쇄는 미션의 불명확성 이외에도 활동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기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해외사무소 책임자의 전문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소 책임자를 담당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보다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 또는 코트라 현지사무소(무역관)와 협조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또한 성과계약 방식을 통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사무소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함
 -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으나 전략성이 상대적으로 큰 인도의 경우, 초기부터 공무원파견을 단행하기보다는 우선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 경제통상뿐 아니라, 정책 수출, 국외 ODA, 지방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외거점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단기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외거점 설치 및 운영이 불가피하며 현실적이거나 지방분권의 심화에 따라 국외거점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통상지원과 정책 수출, 국외 ODA 등이 결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도 크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호결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강내영·김건우, 2018, '글로벌 생산분업구조의 변화 및 시사점', 트레이드 포커스(2018제53호), 한국무역협회
- 경기도청, 2018, 경기도 통상전략 및 수출지원사업, 경기도청
- 대구광역시, 2019, 대구시 수출지원 시책, 대구광역시
- 신현수, 2019,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2019.5.13), 산업연구원
- 코트라, 2019a, 2019 국별 진출전략-동남아·대양주, kotra
- 코트라, 2019b, 2019 국별 진출전략-인도, kotra
- 코트라, 2016,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KOTRA산업통상자원부, 2019
- 서용원 외, 2019, 공급사슬관리, 생능출판사
- 충남도청, 2018,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충청남도
- 충청남도, 각 년도, 충남도정백서, 충남도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 행정안전부
- 홍원표, 2019, 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상무학회2019하계세미나(2019.6.21), 한국상무학회
- 홍원표, 2018, 한반도신경제구상에 대한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충남연구원
- worldbank, 2019, doing business 2019 , training for reform, worldbank

인터넷 사이트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nsp.go.kr/main.do>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